
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

2026. 8. 28.

관 계 부 처 합 동

「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」 추진계획

- **[배경]** 국민 안전과 직결된 3대 분야(보이스피싱, 초국가범죄, 마약)에 범정부 합동으로 집중 대응중

⇒ 이를 민생분야로 확장하여 국민안전 제고, 국민불안 해소,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한 민생안정 저해행위 집중대응 필요

- **[방향]**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·범죄, 제도를 악용한 꼼수·악습 등 민생안정 저해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대응

※ (대응유형 예시) 담합·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거래, 전·월세 및 보험 사기, 압표·바가지 요금, 불법 사금융·채권추심, 할당관세를 통한 부당이익,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

- 특히, 담합 등 민생침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①체감도 높은 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, ②제도개선 병행

① (민생체감 집중) 9월부터 의식주, 생활필수품·서비스, 교육, 에너지 품목 등 민생밀접 분야별 순차적 조사·제재 추진

- 앞으로도 공정위 담합조사 초기부터 범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또는 국세청·관세청 등과 즉시 공조체계 가동

* 상반기 설탕·밀가루 등 먹거리 분야의 20조원 규모 담합 적발

② (제도개선) 불공정거래 적발률을 높이고¹⁾,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²⁾ 신속히 추진

1)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(6월), 담합 처분시효 연장(공정거래법 개정) 등 추진

2) 반복담합시 사업매각명령, 등록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도입(공정거래법 등 개정) 등 추진

- **[추진체계]** 재경부, 공정위, 경찰청 및 관계부처·기관* 등이 「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」을 운영하고, 민생안정 저해행위에 대해 범정부 공조대응

* 농식품부, 해수부, 산업부, 국토부, 문체부, 과기부, 금융위, 금감원, 국세청, 관세청 등

- **[향후계획]** 주기적으로 담합·범죄행위 적발, 불공정 행태 제도개선 등 범부처 합동 대응성과 보고 및 발표(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)